

## 밖은 못 보고 안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치

태평로

김진명

논설위원



유학 시절, 동아시아 외교사를 가르치던 영국인 교수가 “한국인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라서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조선 왕조가 개혁에 성공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물었다. 국호(國號)만 대한제국으로 바꾸지 말고 개혁에 매진해 서방 자본이 두루 이익을 보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독립은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였다. 그러지 못한 채 청·일, 러·일이 한반도를 두고 연달아 전쟁을 벌이자 정세 안정을 위한 영·미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하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영국 입장에서 일본 편을 드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참고 자료로 제시된 청나라 외교관 이홍장(李鴻章)의 서한을 읽다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교수의 주장이 꼭 옳아서가 아니라, 조선이 얼마나 국제 정세에 어두웠는지 여실히 드러나서였다.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생각했던 이홍장은 류큐(오키나와)를 병합한 일본이 조선마저 차지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1879년 조선에 서한을 보내 “일본이 겁내는 것은 서양”이라며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차례로 조약

을 체결해 일본을 견제”하라고 권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목적은 통상을 하자는 것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선은 “예수교는 오도(吾道)와 다르다”는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아편전쟁을 겪어본 청이 서양의 왕래 요구를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조선이 오히려 “서양 나라들과 일본도 당신의 위엄 아래에서는 감히 방자하게 놀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계엄은 국제 정세 무시한 선택  
野 ‘줄탄핵’ 협박도 국내만 보는 일  
‘중국이 웃고 있다’ 소문 도는데  
민감한 시기 한미 동맹 안정시켜야

145년 전의 이 서한들이 문득 떠오른 것은 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한말에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깥일에 어둡고 국내적 논리에만 매몰된 ‘외눈박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야 어떻게 돌아가든 국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비상계엄부터 대의 정세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軍)을 동원해 정당과 언론을 통제하는 순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인

정받지 못한다. 우리 동맹이자 우방인 서방국가들부터 그렇게 봐주질 않는다. 미국 정부는 초기부터 계엄을 “위법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바이든을 만나 ‘아메리칸 파이’까지 불렀는데 참 매몰차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것이다. 바이든이 만든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이어받아 개최해 놓고 야당이 아무리 심했든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냐고 말이다.

‘외눈박이’ 이긴 한덕수 권한대행과 남은 장관들의 ‘줄탄핵’을 거론하는 야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그 탄핵된 대통령의 대행까지 탄핵되면 도대체 어떤 나라로 보일까. 미국이 지금 그나마 믿고 있는 사람이 주미 대사 출신의 한 대행인 것도 사실이다. 그 러잖아도 미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야당이 한 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를 꼽았던 것을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 중국을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했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뒤에서 웃고 있다’는 말까지 돈다. 트럼프 당선 후 동맹 간 마찰을 예상하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을 끌어당기려 했는데, 잘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다는 것이다. 국내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한미 동맹부터 관리해야 한다.



김치소를 만든다.

잡것은 어떻게 만들까. 수심이 얇고 조차가 큰 칠산바다의 고기잡이 어벌과 상관성이 높다. 지금은 안강망을 이용하지만, 그전에 주목망이나 종선망을 이용했다. 모두 어구 입구가 크고 안은 좁고 긴 자루 그물이다. 철에 따라 송어, 병어, 황석어, 새우, 뱀장어, 반지, 갈치, 장어, 꽃게, 주꾸미,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이 그물에 들어온다. 이 중 돈이 되는 해산물은 추려서 팔고 나머지는 잡것을 담근다. 전라도 게미진 김치는 이렇게 탄생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김준의 맛과 섬 [221]

### 전라도 김장용 잡것

지난 주말 아이들까지 가족 모두가 모여 김장을 마무리했다. 사실은 2주일 전 짓것을 끓이면서 김장이 시작되었다. 김장은 배추 맛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핵심은 짓것이다. 이변에 준비한 짓것은 잡것이다. 여기에 작년 가을에 담아 놓은 제주 은갈치 속젓, 봄에 준비한 여수 병어 젓갈, 여름에 준비한 비름도 황석어젓을 더했다.

우리 젓갈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서 멸치젓에서 잡것으로 바뀌었다. 곡성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에게서 영광에서 태어난 아내로 김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뀌면서 그랬다. 전라도 김장 젓갈은 칠산 바다 영향이 큰 영산강 일대의 잡것권과 남해와 가까운 섬진강 일대 멸치젓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결혼이나 직장 등 인구 이동, 해양 환경과 김장 문화의 변화 등이 있어 지역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커다란 솥에 각각 숙성한 젓것을 넣고 끓여서 액젓을 내렸다. 잡것을 끓여 액젓을 내리는 과정에서 골골한 냄새가 진동한다. 그 냄새를 처음 맡아 본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지만, 그 맛을 본 사람은 그리움으로 바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은 깊어진다. 고 흥살이를 시작하면서 젓갈을 다리는 냄새로 이웃 눈치를 살피는 일이 사라졌다. 오히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냐고 오가는 사람들이 묻는다. 잡것은 장인이 자기 커피를 만드는 것처럼 ‘블렌딩’한다. 여기에 고춧가루, 파, 마늘, 미나리, 갓, 생강, 무, 당근, 청각, 참참풀, 생새우, 석화 등 기호에 맞게 더해

## 社 説

### 특검법 등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26일로 일단 연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한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무총리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며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예고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양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탄핵부터 한다고 한다. 게다가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서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달리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위한 논란이 없게 조정한다면 한 대행도 무조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여야와 한 대행

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충돌 대신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이 아닌 한 대행에게 정치 문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점령군식 행태다.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한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대선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 특검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이 대표의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무엇을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계엄으로 인한 정치·경제·외교의 불확실성은 한 대행 체제로 조금씩 줄어들며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 대행 체제를 지지했다. 이런 국면에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이 대표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어렵게 회복한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야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타협한다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李 대표 “한미일 협력 계속”, 이 말은 안 바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은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한·미,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모두 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이런 말이 일관된 입장인지는 것이다. 그간의 이 대표의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2022년 9~10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자 이 대표는 이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다. “일본이 경제 침탈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시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직후 이뤄졌다. 훈련 내용도 북한 잠수함 위협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 훈련은 앞으

로 북·중·러를 자극해 한반도 냉전 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한 미 대사에게 한 말과는 180도 다르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양 이전으로 돌리는 패책”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본심은 이 황당한 인식인가, 이날 주한 미 대사에게 한 말인가. 당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동성명이 나온 후에는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봉쇄의 전면에서 서게 됐다”고 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주한 미 대사에겐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 대표는 지난 3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가 왜 개입하나. 중국에도 세세, 대만에도 세세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큰일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주한 미 대사에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경찰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범죄가 된다.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

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쳐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씨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 등 실명과 함께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있다. “사실”이란 표현까지 등장한다. 계엄 당시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오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해’ 소문도 돌았는데 노씨 발상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은 노씨가 계엄사에 ‘비공식 수사단’을 만들어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군 관계자 60여 명을 이끌고 수사를 지휘하려 했더니 말문이 막힌다.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어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 당국에게 요구한다

비자 발급 당장 중단하라, 《반미-친중 활동 한국인들》에게

미대사관-대사관저 침입-난동 그들 정체를 알고 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한 이재명 정체를 알고 있다  
반미-친중 온갖 부류, 출입국 계속 방관할 건가

미군 떠나라

▲ 촛불난동 1주년을 기념한다는 행사가 열렸다. 2017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미군 떠나라》 손팻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국회의장), 이재명(민주당 대표), 추미애(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MB 구속》《트럼프 탄핵》《아석기 석방》《사드 배치 반대》등의 구호를 외쳤다. © 서성진 기자

민주당은 《반미-친중》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좌익 정당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한 대목이다. 《윤석열 대

령은 한미일 동맹에만 치중했다. 북-중-러 유라시아 전제주의엔 적대했다. 이게 탄핵 사유의 하나다.”란 소리다.

그렇다면 민주당 등은 《반미-친중》이란 자책인가?

한국인 악절반이 《반미-친중》

12월 24일 국회를 통과된 탄핵 결의문에 위 구절이 빠져 있다. 나중에 보니 속 보였음을 알았나? 그 구절을 뺐다 해도, 그들의 속내는 이미 들뚱났다.

민주당과 그 우당(友黨)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탄핵 찬성자들은 결국 《반미-친중》분자들인 셈이다. 이걸 미국은 알고 있나? 자기들이 《동맹국》이려니 알아온 한국인들의 악절반이 《반미-친중》세력이라면, 미국은 지금까지 두 눈 멀쩡히 뜯 채 속아 산 꼴이다. 화안나나, 미국?

《반미》외치며 자녀는 미국 유학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는 《반미-친중》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해변의 모래알만큼이나 많다. 대종이야 어디나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논외로 치자.

문제는, ★먹물캐냐 들었다는 대학교수★대기업 상층부 종사자★연예계★문화계★언론계★각계 전문직★중상층 공무원층에도 이런 부류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몹은 중상층 부르주아이고, 머리는 3급 좌파 내지는 좌파에 동정적인 족속》이다.

이들은 미국 등 서방세계를 《제국주의》라 부르는 《좌파 교육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체질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에 젖어있다. 그걸 즐기기도 한다.

그들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의 인권유린》어찌고 떠들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하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들은 미국 등에 자녀를 유학시킨다. 모순이다.

미국은 속고 있나?

미국은 속고해야 한다. 이런 《반미적 한국인들》에게 계속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할 작정인가? 1980년대에 《반미-친북-친중 혁명운동》에 몰입했던, 그러면서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참회하지 않는 《NL 활동가(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ctivist)》들을 계속 입국시킬 작정인가?

그들 중 다수는 오늘날 저 무도한 국회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미국에 이들이 동맹군인가. 이들과 피투성이로 싸우는 자유 한국인들이 동맹군인가? 미국은 저들 《반미 활동가》들에 용당한 외교적 제재를 가해야 할 때다.

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본질은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다.

이들은 《민중, 민중, 민주》를 곁에 내세우지만, 실은 《극좌 혁명》의 위장명칭일 뿐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듣고 있나? 《주한 미국 대사관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던 저들의 정체를》마किन들은 아직도 모르는가?

미국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4년 12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4년 12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23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